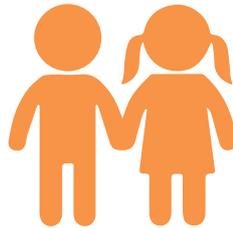


# 제 1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2

양질의 영유아교육·보육 포럼



일시 : 2018. 10. 30(화) 14:00-17:20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11층 강당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차 례

### 주제 강연

<b>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이행 전략</b> .....	3
김광호 사무총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주제 발표

<b>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현황과 과제</b> .....	25
문무경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 토 론

좌장 : 박은혜 교수 (이화여대, 세계어린이교육기구 회장)	
토론 : 전효정 교수 (동아대, 한국아동학회).....	36
유혜선 본부장 (굿네이버스).....	43
엄미선 회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
김현주 팀장 (서울특별시청).....	54
정혜손 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58

[주제 강연]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이행 전략

---

김광호 사무총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이행 전략

2018. 10. 30(화)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15년, 2030년, 2050년과 2100년의 대륙별 인구 규모 전망  
Population of the world and major areas, 2015, 2030, 2050, 2100  
according to the medium-variant projection(UN, DESA, Population Divisio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NY: UN.

Major area	Population(millions)			
	2015	2030	2050	2100
World	7 349	8 501	9 725	11 213
Africa	1 186	1 679	2 478	4 387
Asia	4 393	4 923	5 267	4 889
Europe	738	734	707	646
LAC	634	721	784	721
Northern America	358	396	433	500
Oceania	39	47	57	71

## 나라별 인구 1950, 2015(단위: 백만명, UN, 2015)

나라	인구	나라	인구	나라	인구	나라	인구
China	544	France	42	China	1 376	Viet Nam	93
India	376	Bangladesh	38	India	1 311	Egypt	92
USA	158	Nigeria	38	USA	322	Germany	81
Russian F	103	Pakistan	38	Indonesia	258	Iran	79
Japan	82	Ukraine	37	Brazil	208	Turkey	79
Germany	70	Spain	28	Pakistan	189	DR Congo	77
Indonesia	70	Mexico	28	Nigeria	182	Thailand	68
Brazil	54	Poland	25	Bangladesh	161	UK	65
UK	51	Viet Nam	25	Russian F	143	France	64
Italy	47	Turkey	21	Mexico	127	Italy	60
		Egypt	21	Japan	127	S Africa	54
				Philippines	101	Myanmar	54
				Ethiopia	99	Tanzania	53

## 2050 나라별 인구 예측(단위: 백만명, UN, 2015)

나라	인구	나라	인구	나라	인구	나라	인구
India	1 705	Mexico	164	Iran	92	Myanmar	64
China	1 348	Egypt	151	Iraq	84		
Nigeria	399	Philippines	148	Sudan	80		
USA	389	Tanzania	137	UK	75		
Indonesia	321	Russian F	129	Germany	75		
Pakistan	310	Viet Nam	113	Niger	72		
Brazil	238	Japan	107	France	71		
Bangladesh	202	Uganda	102	Mozambique	66		
DR Congo	195	Turkey	96	S Africa	66		
Ethiopia	188	Kenya	96	Angola	65		

# 2100 나라별 인구 예측(단위: 백만명, UN, 2015)

나라	인구	나라	인구	나라	인구	나라	인구
India	1 660	Uganda	203	Sudan	127	Cameroon	82
China	1 004	Egypt	201	Russian F	117		
Nigeria	752	Brazil	200	Madagascar	105		
USA	450	Bangladesh	170	Viet Nam	105		
DR Congo	389	Philippines	169	Zambia	105		
Pakistan	364	Iraq	164	Cote d'Ivoire	101		
Indonesia	314	Kenya	157	Mali	93		
Tanzania	299	Mexico	148	Turkey	88		
Ethiopia	243	Angola	139	Malawi	87		
Niger	209	Mozambique	128	Japan	83		

Total Population, 1950, 2015, 2030, 2050 and 2100 (Medium Variant). (UN, DESA, Population Divisio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NY: UN.

Country	Population(thousands)				
	1950	2015	2030	2050	2100
World	2 525 149	7 349 472	8 500 766	9 725 148	11 213 317
ROK	19 211	50 293	52 519	50 593	38 504
DPRK	10 549	25 155	26 701	26 907	24 842

인구 크기	나라 이름	수	누계
1억 이상	China, India, USA, INS, BRA, PAK, Nigeria, BGD, RUS, JP, MEX, ETH, PHP	13	13
5천만~1억	Egypt, VTN, DRC, Iran, TUR, GER, THA, FR, UK, IT, Mya, RSA, TZ, ROK	14	27
3천만~5천만	Spain, Colombia, Kenya, Argentina, UKR, Algeria, Uganda, Iraq, Poland, Sudan, Canada, AFG, Morocco, Malaysia, VEN, Peru.	16	43
2천만~3천만	UZB, Nepal, Angola, Saudi, Yemen, Ghana, Mozambique, DPRK, MAD, Cameroon, Cote, TAI, AUS, Sri Lanka, Romania, B Faso.	16	59
1천만~2천만	Niger, Malawi, KAZ, SYR, Mali, Chile, NET, Ecuador, Cambodia, Zambia, Guatemala, SEN, ZIM, S Sudan, GUI, Chad, RWD, BGM, BRN, TUN, Cuba, Bolivia, Benin, SOM, Portugal, Greece, DOM, CZE, Haiti, Jordan	30	89

인구 크기	나라 이름	수	누계
5백만~1천만	AZR, Sweden, HUN, BLR, HND, Austria, TAJ, Israel, SWZ, Togo, HK, Laos, SER, BUL, PAR, PNG, Libya, LEB, ESAL, S Leone, UAE, NIC, ERI, SGP, KYR, CAF, Denmark, Finland, SLO, TKM, Norway, Ireland.	32	121
1백만~5백만	Congo, C Rica, Georgia, Liberia, NZ, CRO, B&H, MAU, Panama, R of Moldova, Oman, URU, P Rico, Mongolia, Albania, ARM, Jamaica, Kuwait, LIT, WBAK, Namibia, Qatar, Botswana, MAC, GAM, SLO, LES, LAT, KOS, GAZS, GUI, GAB, Swaziland, BAH, MAU, TL, EST, CYP, T&T.	39	160
2십만~1백만	Fiji, DJI, COM, EGUI, Bhutan, GUY, SOLI, MNT, WSA, MAC, LUX, SUR, CAB, Brunei, Malta, Maldives, Belize, Iceland, Bahamas, Barbados, F Polynesia, Vanuatu, N Caledonia, ST & Principe, Samoa.	25	185
2십만 이하		55	240

# 작은 나라들1

200 [Isle of Man](#) 88,195  
 201 [Andorra](#) 85,660  
 202 [Dominica](#) 73,757  
 203 [Marshall Islands](#) 73,376  
 204 [Bermuda](#) 70,537  
 205 [Guernsey](#) 66,297  
 206 [Greenland](#) 57,728  
 207 [Cayman Islands](#) 57,268  
 208 [American Samoa](#) 54,194  
 209 [Northern Mariana Islands](#) 53,467  
 210 [Saint Kitts and Nevis](#) 52,329

211 [Turks and Caicos Islands](#) 51,430  
 212 [Faroe Islands](#) 50,456  
 213 [Sint Maarten](#) 41,486  
 214 [Liechtenstein](#) 37,937  
 215 [British Virgin Islands](#) 34,232  
 216 [San Marino](#) 33,285  
 217 [Saint Martin](#) 31,949  
 218 [Monaco](#) 30,581  
 219 [Gibraltar](#) 29,328  
 220 [Palau](#) 21,347

# 작은 나라들2

221 [Anguilla](#) 16,752  
 222 [Wallis and Futuna](#) 15,664  
 223 [Tuvalu](#) 10,959  
 224 [Nauru](#) 9,591  
 225 [Cook Islands](#) 9,556  
 226 [Saint Helena, Ascension, and Tristan da Cunha](#) 7,795  
 227 [Saint Barthelemy](#) 7,209  
 228 [Saint Pierre and Miquelon](#) 5,595  
 229 [Montserrat](#) 5,267  
 230 [Falkland Islands \(Islas Malvinas\)](#) 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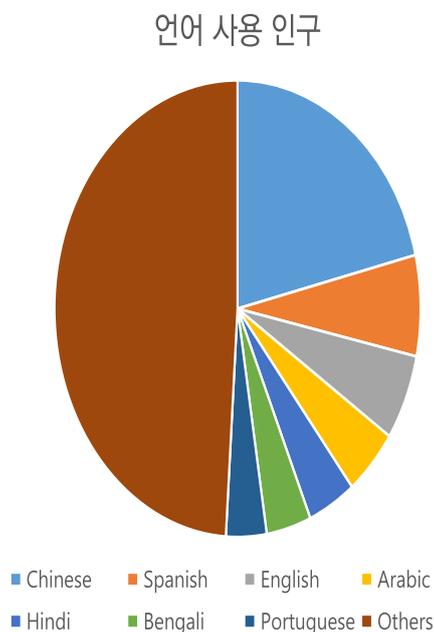
231 [Norfolk Island](#) 2,210  
 232 [Christmas Island](#) 2,205  
 233 [Svalbard](#) 1,872  
 234 [Tokelau](#) 1,337  
 235 [Niue](#) 1,190  
 236 [Holy See \(Vatican City\)](#) 1,000  
 237 [Cocos \(Keeling\) Islands](#) 596  
 238 [Pitcairn Islands](#) 54

# 장래 인구 추계 (천명) (통계청, 2016)

Year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	51,015	51,974	52,941	52,198	49,433	45,246
0~14	7,030	6,574	6,109	5,647	4,716	4,265
15~64	37,444	37,266	33,878	29,431	25,905	22,444
65~	6,541	8,134	12,955	17,120	18,813	18,536
65~74	3,885	4,652	7,635	8,281	7,450	6,796
75~84	2,144	2,699	3,850	6,509	7,259	6,690
85~	512	783	1,470	2,330	4,104	5,050

## Top 7 most spoken languages in the world, Source: Ethnologue, 2017.

언어	사용 인구(Million)
Chinese	1,300
Spanish	437
English	372
Arabic	295
Hindi	260
Bengali	242
Portuguese	219
Others	48.8%





#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which is sustainable in the long run taking into multipl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objectives which result in preserving the planet earth for future generations while enjoying the resources by the present gener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 Development that meet the needs of present genera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needs of the future generations.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Our Common Future, 1987》.

- Post-MDGs, Post-2015.
- 2030
- 17 Goals, 169 Targets.
- Principles: Social Inclusion,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Protection



#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 세계 인구의 11%, 767백만명 하루 1.9\$ 미만으로 생활(2013).
2. 세계 인구의 45%만 사회 보장 체제의 보호를 받음.

#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 2014~2016, 세계 인구의 11%인 793백만 명 영양 부족 상태.
2. 지속 가능 식량 생산 체제와 복원력 있는 농업 관행 필요.

###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1. 생식, 모성, 신생아와 아동 건강:  
사산, 영유아 사망, 모성 보호, 미성년자 임신
2. 감염병: HIV, TB, malaria, hepatitis, ...
3. 비감염병과 정신 건강:  
심장/암/호흡기/당뇨, 우울/자살 정신 질환은 남성이 2배 취약  
담배/알코올, 대기오염: 비청정 연료/ 교통/산업/ 쓰레기/난방 등

###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다른 건강 위험 요소들: 교통 사고, 중독, ...
5. 보건 체제와 자원: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 인력 확대

##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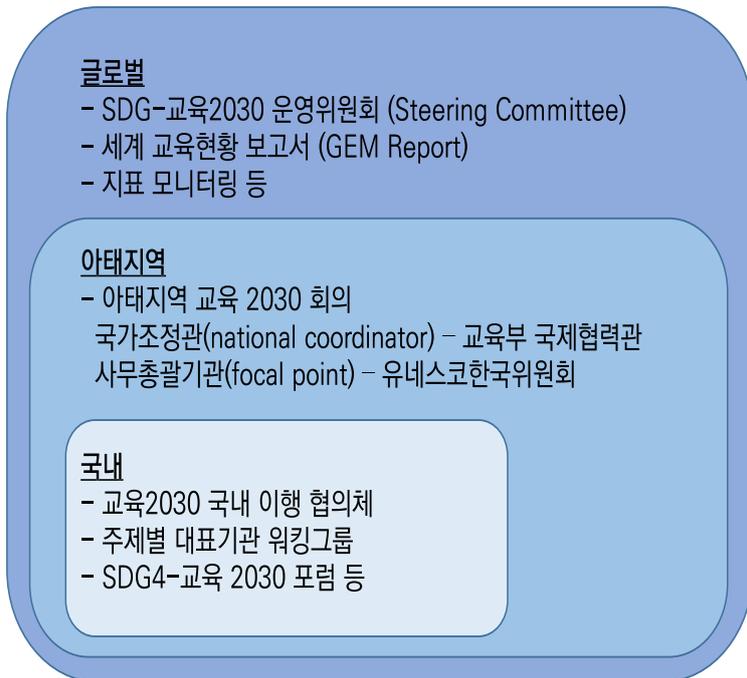


1. 세계 평균 취학률은 초등학교 91%, 중학교 84%, 고등학교 63%(2014).
2. 미취학 아동은 263백만명.
3. 엄마가 읽을 수 있으면 5세 미만 아동 생존률 2배(UNIC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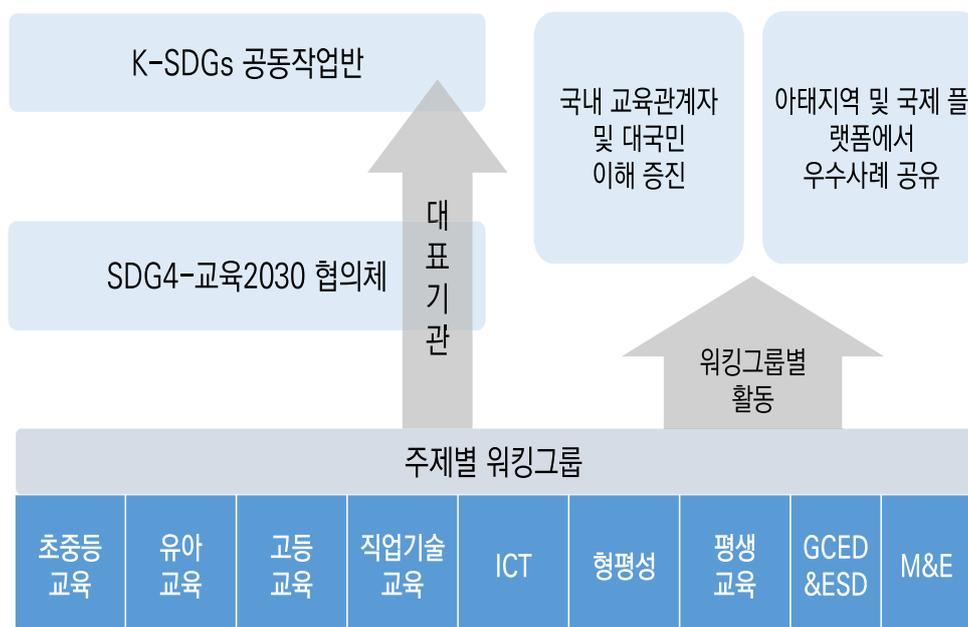
## SDG4 세부 목표

-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 SDG4-교육 2030 주요 이행 체계



# 국내 SDG4-교육 2030 이행 체계



##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1. 여성에 가해지는 물리적/성적 폭력, 아동 결혼, FGM 근절
2. 무보수 가사 돌봄 노동
3. 정치 참여
4. 관리직 진출
5. 성적 자기 결정권

##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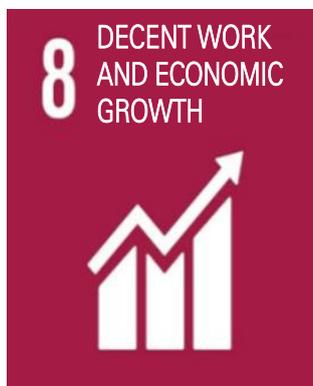
1. 안전한 먹는 물
2. 안전한 화장실 vs 야외 배변
3. 깨끗한 물 생태계 건전 관리

##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1. 1.06십억명이 전기 없이 생활(2012)
2. 취사를 위한 청정 연료와 기술
3. 재생 에너지: 물, 태양, 바람 이용
4. 에너지 효율 높이기: GDP 단위 당 에너지 사용 비율

##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1. 1인당 GDP 성장: 세계 0.9%(2005~2009) → .6%(2010~2015), LDCs 4.6%(2005~2009) → 2.5%(2010~2015).
2. GDP 성장: LDCs 7.1%(2005~2009) → 4.9%(2010~2015).  
LDCs 성장 목표 7%.
3. 실업: 여성과 청년층에 더 심각.
4. 아동(5~17) 노동: 246M(2000)에서 168M(2012)로. 위험 직종. 소년병. 강제 노동.
5. 금융 서비스 접근 기회.
6. 국제 사회의 LDCs 무역 우대 필요.

##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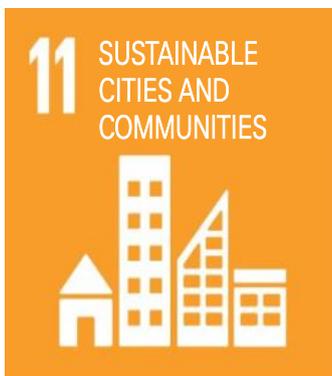
1. **교통 서비스**: Air Transport 3.5% of Global GDP
2. **제조업**: 15.3%(2005) → 16.2%(2016) of GDP, e 효율 높여 CO<sub>2</sub> 방출 줄이기
3. R&D 투자: 1.5%(2000) → 1.7%(2014) of GDP
4. 백만명 당 연구자 수(2014): 세계 1,098명, 유럽/북미 3,500명, **LDCs 63명**
5. Mobile-cellular Services(2016): 95% World, 85% LDCs

##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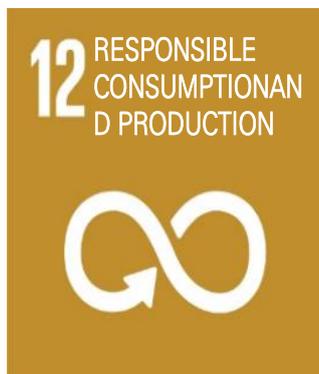
1. 가난한 **40%** 소득 증가율을 국가 평균보다 더 높이자
2. 이민 근로자 본국 송금료 부담 줄이기. **목표 3%**, 실제 6% ~11%
3. IMF 개도국 결정권 비율: 33%(2010) → 37%(2016)  
국가 수 비율 74%, IBRD는 38%
4. LDCs와 개도국에게 무관세와 우대 조건 확대
5. LDCs, SIDSs 추가 지원. 8국만 **0.15% of GNI to LDCs** 지원 충족

##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 2015년 현재 4십억명,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  
2030년에는 5십억명 예상.
2. 대중 교통/녹지/유산 등 기초 서비스와 인프라, 도시의 계획 없는 확장 부작용 예방.
3. 슬럼 거주자: 792백만명(2000) → 880백만명(2014)
4. 쓰레기 안전 처리와 관리는 도시 환경 큰 문제. 65%만
5. 쓰레기 처리 혜택(2009~2013).
6. 공기 오염: 도시 인구 9/10가 WHO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공기를 마신다(2014).

##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 국가와 분야별 계획, 지속 가능한 기업 관행과 소비자 행동
2. 유해 화학 물질과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국제 규범 지키기
3. 천연 자원 사용 줄이기/재활용/재사용
4. 공기, 땅과 물 오염 그리고 독성 화학 물질 노출 방지 조약 지키기

##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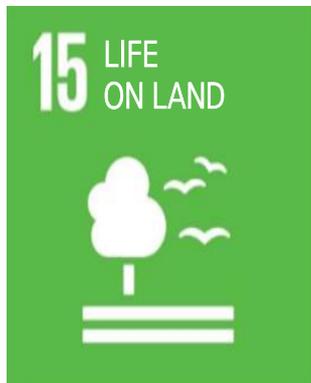
1. 지구 온난화: 산업화 전보다 1.1°C 올라
2. 가뭄, 폭는 빙하, CO<sub>2</sub> 농도 증가
3. 2016. 11. 4.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준수

##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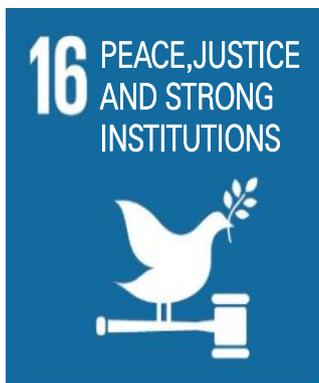
1. 해양 오염, 부영양화, 해양 산성화 막고
2. 해양과 연안 생태계 보호
3. 어류 남획 없애기
4. R&D

##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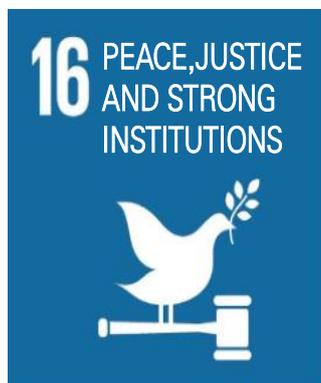
1. 지구의 숲 넓이: 31.6%(1990) → 30.8%(2010) → 30.6%(2015)
2. 토양 오염과 사막화
3. 생물 다양성 손실과 멸종 위기종 증가

##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 폭력적 갈등과 살인,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없애기
2. 성 착취,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 매매에 여성, 아동, 소녀들이 더 많이 희생
3. 성 폭력이 아동 권리 중 가장 큰 침해
4. 재판 전 구금: 32%(2003~2005) → 31%(2013~2015), 공정 투명 사법체제 진전 없음
5.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공직자 부패 초래

##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6. 정부 예산 지출의 투명성 보장
7. 출생 등록은 정의와 사회 보장의 조건: 지구 평균 출생등록 71%(2010~2016)
8. 정보의 자유 보장 입법과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교육 등 실행 제도와 장치 미흡
9. 37%(2016)의 국가만 독립된 국가 인구 기구 설립

##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1. 선진국의 ODA/GNI 0.7% 개도국에, 0.15~0.20%를 LDCs에 지원
2. DAC 회원국의 ODA/GNI: 0.30%(2015) → 32%(2016)
3. ODA/GNI 0.7% 넘는 나라(2016): GER, DEN, LUX, NOR, SWD, UK
4. 이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은 가장 큰 도움

## • 참고문헌

- 문도운 외(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 목표. 서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NY: UN.
-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 김 광 호(金光豪), 1960.

- 1987, 제31회 행정고시
- 1988~2016: 교육부
- 과장: 교원정책/평가기획/다자협력
- 사무국장: 한국교통대/한국교원대/부산대
- 제19대 충청북도 부교육감
- 제16대 국립국제교육원장
- 현, 제20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1980~1987, 성균관대 사회학과 학사
- 1981~1983, 육군 복무.
- 1994~1995, UNESCO, Bangkok
- 2001~2005, 주 OECD 대표부 참사관
- 2009~2011, 한국교육개발원
- 1993~2011,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 <안전, 건강, 성실, 재미, 공감, 회복>

- 교원 정년 단축, 1998~1999.
- 교원 인사 관리 매뉴얼, 1998~1999.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2006~2007.
- 교장 공모, 수석교사, 교원 평가, 다면 평가, 평정 기간, 2006~2007.
- 교원양성기관 평가, 2006~2007.

[주제 발표]

##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및 과제

---

문무경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 국내 이행 현황 및 향후 과제<sup>1)</sup>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가 필수적이라 인식에 기인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기초로서, 교육부문(SDG 4) 내 여타 목표 및 교육부문 이외의 다른 16개 부문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ARNEC, 2016).

지난 15년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첫 번째 목표’ (EFA Goal 1)로서 국제적, 지역적 수준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영유아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 취학 전 교육기관 등록률의 증가(1999년도 33%에서 2012년도 54%로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1명의 영유아는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 상태이며, 상당수의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유아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아랍 및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취학 전 교육기관 취원율이 20%에 불과한 점 등, 결과적으로 EFA Goal은 달성되지 못하였다(Hayashikawa, 2015). 이에,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측정가능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정의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순한 교육기회 제공(equality)을 넘어서 교육의 질적 형평성(equity)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국제적 노력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본부는 2010년 러시아정부와 공동으로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EFA 목표 1의 영유아부문 목표 달성 평가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를 개최하였다. 본 세계회의에서 ‘모스크바 성명서’ (Moscow Framework for Action and Cooperation)를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정책적 노력 강화, 효과적인 영유아 서비스 및 필요한 자원과 자원 확보 등이다.

모스크바 성명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유네스코 아태교육국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2013년 서울에서 제1차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Asia-Pacific Policy Forum on ECCE)’을 유니세프, ARNEC, 한국개발원과의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아태지역 31개국의 대표단에서 21명의 장관을 포함한 약 250여명이 참여하였다. 본 제1차 포럼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8).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pp. 33~44) 2장.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문무경).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보 교류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을 위한 논의의 장(場)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문무경,채송아, 2013).

제2차 아태지역 장관 유아정책포럼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유네스코 방콕 아태교육국, 유니세프, ARNEC의 공동주관으로 2016년 푸트라자야에서 개최되었으며,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UNESCO, 2016). 푸트라자야 선언문에서는 평생학습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영유아의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영유아 서비스의 형평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투자, 법과 규정 설정, 커리큘럼, 질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상기하였다. 특히, 본 선언문에서는 Educatio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Target 4.2 달성을 위하여 아태지역의 우선적 실행과제 9가지를 명시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최소 1년의 무상교육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의 통합적 정책, 영유아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문무경, 2016).

## 1. SDG Target 4.2 및 성과지표의 개념 정의<sup>2)</sup>

SDG 4는 교육부문 전반에 대한 목표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이다. SDG 4는 7가지 세부목표(target)와 3가지 이행방안(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세부목표(Target 4.2)가 영유아 부문의 목표로 ‘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에게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이다. 이 목표에서 강조하는 점은 크게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 양성평등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 첫째,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를 위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 둘째, 모든 유아에게 최소한 1년 동안 양질의 무상의무교육을 보장하며,
- 셋째,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하며, 초등학교 또한 모든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SDG Target 4.2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의 2가지 글로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의 성비
-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기간의 체계적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참여율

2) 이 절은 UNESCO(2016).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와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2016).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을 토대로 작성함.

글로벌 지표 4.2.1은 유아의 사회심리적 안녕(psychosocial well-being)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료한 정의가 필요하며, 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강조한다. 이 지표는 초등학교 입학 아동 중 특수아의 비율로 파악 가능하다. 글로벌 지표 4.2.2는 ‘초등학교 취학 전 최소 1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의미하며, 5세 아 대상 보편적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영유아부문 관련 주제별 지표(thematic indicator)로 긍정적인 가정학습 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영유아 비율, 취학 전 교육기관 취원율, 무상 및 의무 유아교육 법적 연한을 지표가 고려되고 있다. 또한 이행 방안 관련 글로벌 지표 가운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4.a.1), 최소한의 양성교육과 현직연수를 받은 교사(4.c.1)에도 영유아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 2. SDG 4.2의 국내 이행 현황

### 가. Target 4.2.1. 관련 국내 현황

현재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므로 Target 4.2.1 지표의 국내 현황은 좁은 의미에서 초등학교 입학 아동 중 특수아의 비율, 또는 현재 취학 전 장애 영유아 현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등록된 우리나라 0-5세 장애영유아는 총 8,598명으로, 전체 장애인(2,511,051명)의 0.3%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 등록 현황). 2015년도에 비하여 약 5.5% (475명)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46명, 1세 521명, 2세 1,047명, 3세 1,583명, 4세 2,293명, 5세 3,108명)이다. 장애 유형별 영유아 현황은 뇌병변(3,129명)> 지적 장애(1,902명)> 자폐(1,072명)> 청각 장애(894명)> 언어 장애(735446명) 순이다. 2015년에 비하여 언어장애 영유아는 289명, 자폐아는 134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폐아는 전체 자폐인의 4.7%를 차지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17)에 의하면, 장애영아는 총 148명(여아 66명, 약 45%), 유치원 재원 특수유아는 총 948명(여아 338명, 약 36%)로 남아의 특수아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장애 영유아 현황(2008~2016)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영유아	8,754	9,516	8,448	7,933	7,886	7,442	7,657	8,122	8,598
0세	61	132	36	37	33	29	31	26	46
1세	648	774	493	401	508	437	446	459	521
2세	1,195	1,499	1,170	1,023	1,097	1,088	1,067	1,066	1,047
3세	1,614	1,732	1,880	1,569	1,473	1,549	1,583	1,566	1,583
4세	2,224	2,338	2,122	2,322	1,967	1,908	2,032	2,196	2,293
5세	3,012	3,041	2,747	2,581	2,808	2,431	2,498	2,809	3,108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 현황.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7. 6. 30 인출.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행복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고려되고 그 개념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 현상과 가족구조와 기능 등의 변화, 부모의 자녀양육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양육기능 강화,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문제 등에 기인한다.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시로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전업주부의 종일제 보육 이용 증가 등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기능 및 책임감은 저하되고 장시간 기관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부모간의 정서적 유대 약화, 상호작용 시간 부족 및 영유아의 신체적 피로감 상승의 문제를 야기하였다(김종호 외, 2017, p. 81).

영유아 사교육 양상 또한 심화되는 추세로, 우리나라 영유아 심신의 안녕 수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드높다. 적절하지 않은 조기 사교육은 공격성과 불안, 스트레스 증대와 같이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부미, 이수정, 20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세아의 사교육 시간 비중은 각각 4.8%(68분), 4.1%(59분) 정도이며, 가정에서 양육되는 5세아는 12.1%(2시간 55분)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김은영 외, 2016).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예체능보다 학습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절반이상의 부모가 자녀의 현재 사교육 수준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며, 현재 사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27~40%로 높게 나타난 실정이다(김은영 외, 2016).

특히,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적정 학습시간 법제화를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선정하였다(청와대, 2017). 요컨대, 4.2.1의 지표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매우 주요한 국가적 현안과 관련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념 정의 및 측정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 나. Target 4.2.2. 관련 국내 현황

4.2.2의 지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최소 1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의미하며, 5세아 대상의 보편적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어촌 5세 유아 대상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도입한 이래 2012년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5세아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5세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93.5%에 달한다. 2013년도에 누리과정 비용지원은 모든 3세아와 4세아로 전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3-5세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90.0%를 상회하고 있다.

<표 2>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2015)

구분	인구수 (A)	유치원 (B)	어린이집 (C)	계 (B+C)	비율 (B+C)/A
3세	475,519	172,114	253,294	425,408	89.5
4세	473,120	249,197	180,249	429,446	90.8
5세	447,817	260,544	147,278	407,822	91.1
계	1,396,456	681,855	580,821	1,262,676	90.4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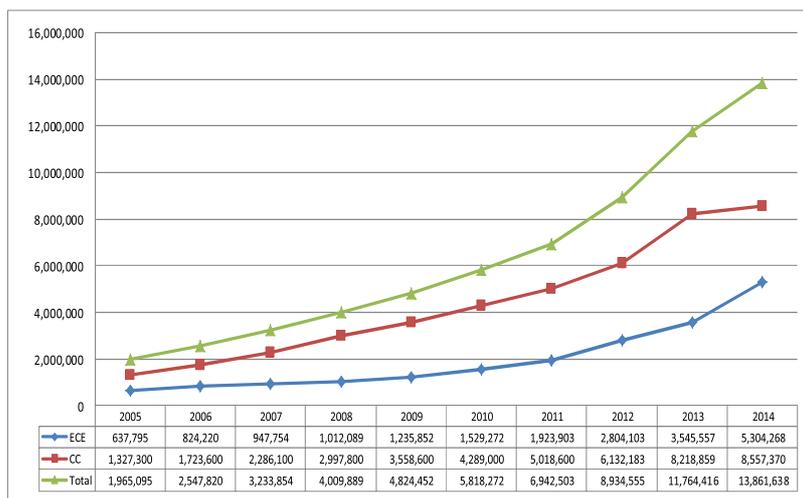
2)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

3) 행정자치부(015). 주민등록통계: 0-6세

이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에 3-5세아 대상 누리과정 시행으로 취학 전 무상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증대로 가능하였다. 2014년부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GDP 대비 1%에 이르며, 이는 OECD국가 평균인 0.8%를 넘어선다(OECD, 2017a).

<표 3> GDP 대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적투자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CCE	5,710	7,405	8,547	11,864	12,996
% of GDP	0.52	0.64	0.71	0.96	1.01



[그림 1]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정부 공적 투자(2009-2014)

주: 보육예산의 경우, 지방비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교육통계(2010-2014, 각년도), 유아교육 연차보고서(2009-2014)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예산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증대로 보편적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비용부담 수준이 높으므로, “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통상적으로 “무상” 교육은 부모 비용부담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사용한다).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최효미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각각 월 평균 13만 5천원과 6만 1,500원을 지불하며, 이는 가구소득대비 3.5%, 1.9%를 차지하였다.

<표 4> 기관별 영유아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교육보육기관 이용 전체 영유아		
	평균	영유아 수	가구소득대비 비율
전체	96.4	2,284	2.7
어린이집	61.5	1,497	1.9
유치원	130.5	742	3.5

주: 1) 가구소득대비 비율: 가구소득 모름/무응답과 0원은 분석에서 제외함.

2) 현재 기관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함.

자료: 최효미(2016).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75%를 상회하며 누리과정

지원 단가(3-5세 유아 1인당 22만원)가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산정된 표준유아교육비와 보육료의 절반 수준(최은영 외, 2016)으로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립 기관이용에 따른 비용 격차는 서비스 질 및 접근성 격차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 보장을 위한 보다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3.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가. 전반적 과제

무엇보다도 SDG Target 4.2와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가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 연계되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 및 추진과제에 반영되어 이행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철학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7.12.27일자 보도자료). SDG Target 4.2 관련 지표는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평등 보장, 유아중심 교육문화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목표와 추진과제, 세부 실천전략에 대부분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 관련 국정과제와 SDG 4.2의 관련성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 관련 국정과제	SDG Target 4.2
1.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4.2.2.
2.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증대)	4.2.2.
3. 저소득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입학 우선순위 부여 강화)	4.2.2.
4. 사회취약계층 유아에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사 확대, 다문화유아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4.2.1
5.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적 격차 해소를 통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교사처우 개선, 자격체계 개편 등)	4c.1
6.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의 법제화를 통한 유아 중심 교육과정 운영	4.2.1
7. 영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교육 및 사교육 억제	4.2.1.
8.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등)	4a.1
9. 공·사립 유치원간 격차 완화	4c.1
10. 미래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유아 수 및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 등)	4a.1

자료: 문무경 외(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1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관련 국정과제를 토대로 재구성함.

한편, 국내 유아교육정책과 SDG Target 4.2 관련 지표의 연계를 위하여 용어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세부목표와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국내 주요관계 집단은 물론 모든 시민이 명확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보편적 유아교육을 달성하였으나 실상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이 아니며, 모든 유아에게 무상 유아교육에 대한 법적 권한 (legal entitlement)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노르딕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아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60~90일) 내에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및 주제별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부문의 경우, 보건, 안전, 영양, 여성고용, 돌봄, 교육 등 다양한 부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부문에 흩어져 있는 자료와 정보의 수집, 분석, 공개, 활용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문무경, 201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최신 정보를 집대성하여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활용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SDG 4.2 달성 및 모니터링의 국내 이행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담당할 주체와 기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유아교육보육 현장, 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영유아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와 옹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따른 책무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SDG 4.2 이행의 책무성은 흔히 중앙정부에서 출발하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이행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세부목표 글로벌 지표 관련 과제

##### 1) 4.2.1. 지표 관련 과제

###### ■ *사회심리적 안녕과 행복 개념 정의*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건강, 학습, 사회심리적 안녕과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부모, 교사, 전문가, 행정가 등 주요관계집단의 관점은 물론 영유아의 관점을 반영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합의된 개념은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획기적인 공적투자 증대에 따른 유아의 행복한 성장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특수아, 다문화 유아, 저소득층 유아 등)의 사회심리적 안녕을 진단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유아의 학교준비도 관련 발달과 학습 성과 측정 및 도구 개발*

또한 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학습을 측정하는 광의의 학교준비도와 관련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측정 방법과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유아평가는 유아교육분야에서 지양되어 왔으며, 주로 교실에서의 교사관찰 및 일화기록, 포트폴리오 등에 의존해 왔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고조됨에 따라 유아의 발달과 학습 성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평가방법과 도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학교준비도 평가도구는 캐나다의 EDI (Early Development Instrument)이며, 교사에 의한 평정척도이다. OECD, 유네스코 (MELQO: Measuring Early Learning Quality and Outcomes), 유니세프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등에서 유아의 학습과 발달 성과(child outcome)

및 웰빙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ARNEC (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은 유니세프의 의뢰로 2012년도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East Asia-Pacific Early Child Development Scale을 개발하여 현재 검사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안해정 외, 2017). 우리나라에서도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5개 학습영역에 대한 3-5세아 관찰척도가 개발되었으나(이정림 외, 2014), 아쉽게도 전국단위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유아의 총체적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량 강화*

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행복감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올바른 자녀양육관을 정립하고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부모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10년에 학부모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하는 전국에 설치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각종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최근 대상 범위를 유치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며,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는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전국에 부모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의 ‘대한민국 부모교육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나, 동시에 지역사회 및 부모단체 중심의 자생적인 ‘좋은 부모되기 캠페인’ 등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2) 4.2.2. 지표 관련 과제

■ *완전한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달성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4.2.2. 지표(초등학교 취학 전 최소 1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에 있어서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현 정부의 임기까지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한 상태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그반바와 같이, 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 *유아교육·보육기관 미이용아 현황 파악*

또한 현재 누리과정 비용지원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기관을 이용하는 않는 약 10%의 사각지대 유아(영어학원 이용 또는 가정양육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글로벌 지표 관련 과제이외에도,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 간의 정책 조정 및 교사 전문성 향상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높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특히, 유치원의

경우), 보육교사의 낮은 자격기준과 보수 수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및 공사립 기관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네트워킹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문무경, 2016). 또한 OECD(2017b)의 유초연계(transition)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 효과를 초등교육단계 이후까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가 중요하며, 교육 형평성 차원에서 취약계층 유아의 경우는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고려하여 유초연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다. 국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공유하고 확산할만한 SDG 4.2 영유아 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국내 우수사례는 취학 전 1년 보편적 무상 영유아교육과 보육 달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적 의미의 무상교육이기는 하나, 영유아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인식과 획기적인 투자 증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추진되어 온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2012년 누리과정 정책 도입과 더불어 만5세아를 대상으로 실시, 2013년에는 만3, 4세아에게 전면 확대되어 거의 15년만에 달성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증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사례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과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의 누리과정 도입 및 질 모니터링 시스템, 유자격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 실행,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을 위한 우선적 지원 정책 등의 추진 배경과 과정, 성과와 교훈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2017.12.27.일자).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 보도자료.
- 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3.
- 김중호, 강상인, 최선미, 서은주, 이현지(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문무경, 박창현, 김문정(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20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과제, 육아정책브리프 제 54호,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채송아(2013).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 결과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안해정 외(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구(I):기초교육 실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이부미, 이수정(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 18, 85-107.
- 이정립,정주영, 최효미, 오유정, 이정아(2014). 3-5세 누리과정 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김나영, 엄문영, 최윤경(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30.
- 최효미, 김길숙, 이동하, 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8.
- ARNEC (2016). ECD in the SDGs: A briefing note.
- Hayashikawa, M.(2015, May). Education agenda 2030 and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pre-World Education Forum session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7. 6월 인출.
- OECD(2017a).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Author.
- OECD(2017b). Starting Strong V: Transition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school education, Paris: Author.
- UNESCO(2016). 2016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Education for people and planet: Creating sustainable futures for all.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2017). 2016 세계교육현황 보고서.

mgmoon@kicce.re.kr

## [토론] 1

---

전효정 교수  
동아대, 한국아동학회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투자는 인간발달과정의 민감기인 생애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출발선에서의 평등’ 정책으로 실행되는 사회투자도 부의 재분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SDG를 통해 정부 및 사회의 관심의 주체가 영유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에서 관련 연구와 정책의 분수령으로 삼을 수 있겠다.

영유아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SDG의 총 169개의 목표(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하다. 지금은 SDG 4.2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선행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범위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즉, 보건, 안전, 영양, 여성고용 등 영유아와 관련된 다른 세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범위를 넓혀가려는 노력이 영유아교육 관계자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단지 영유아와 관련된 교사, 부모 등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SDG 4.2 성과지표 개념 정의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의 성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아동 중 특수아 비율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상발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정상발달은 비정상발달이 아니라 고 소극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상발달에 대한 너무나 좁은 기준으로 인해 정상발달 현황이 실제보다 높은 성과지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와 특수아 진단에 대한 법적 규정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최근 국내의 발달지연율 보이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영유아건강검진에서 확인된 발달지연 영유아는 대구(15.07%), 부산(14.49%) 등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높다(부산일보, 2017. 12. 6).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기간의 체계적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참여율”을 취학 전 최소 1년 동안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이용률, 보편적 무상

유아교육 및 보육으로 보고 있다.

4.2.2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부분을 ‘무상교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따라서 이 원고에서는 부모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혹은 매우 낮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SDG 4.2.2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유아교육이 지향해야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물론 무상교육에 대한 주장과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합당한 주장일 수 있으나, SDG 4.2.2가 무상교육을 위한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교령(2018)은 SDG 4와 관련하여 ‘교육기본통계(유치원 취원율)’과 ‘보육통계(어린이집 취원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SDG 4.2.2의 해석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교육과 보육이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체계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일 수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보육이 세계적 기준의 ‘무상’교육보육인가? 세계적 지표로 활용되려면 비교 가능한 개념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북유럽의 무상교육 서비스 수준은 양과 질에 있어서 타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은 SDG 4.2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지표를 어떻게 구축하여,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SDG 4.2 국내 현황 파악을 통한 전략적 원칙 수립 필요

### 가. 4.2.1 국내 현황 및 전략적 원칙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다. 정상발달은 초등 특수아 비율로 현황 파악한다. (중략) 현재 한국 현황을 살펴보면 남아의 특수아 비율이 높다.”

생애초기에는 주요 발달 영역에 성차에 따른 발달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일부 장애 영역도 선천적으로 성차와 관련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성차를 구분하여 남아와 여아에 대한 표준화 지표를 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4.2에 말하는 성비가 양성평등 원리의 일환으로서 특히, 잠재력(혹은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관련 있다면 선천적 성차에 크게 좌우되는 지표와는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성별로 구분된 지표를 각각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건강, 학습 및 사회 심리적 안녕, 행복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략) 한국 사회의 문제, 영유아-부모 정서적 유대 약화, 영유아의 피로감 상승, 지나친 사교육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개념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SDG의 대상 분야(환경, 사회,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원칙, 원리,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EU는 2001년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를 수립하고 법제화하였으며, 10대 원칙을 수립하고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Gap과 갈등은 불가피하며,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 혹은 중도적 상황으로서 unique한 전략적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가령,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증대된 한국 정부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SDG 과제 이행에 부합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며 또한 영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 나. 4.2.2 국내 현황 및 전략적 원칙

2012년 누리과정 시행과 무상교육보육, 90%를 상회하는 3-5세 아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의 측면에서 발표자의 한국 상황의 문제 인식과 과제에 대한 고민도 없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제가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들이 함께 고려되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 지표, 유치원 어린이집 학대 및 폭력 등 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영유아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 등의 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과제

#### 가. 전반적 과제

4.2. 지표에 문재인 정부정책 방향성 및 추진과제, 세부 실천전략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지표에 연계하기 위해 용어의 명료화 필요하다. 발표자가 제안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법제화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관련 데이터 축적, 모니터링 관리, 활용 기능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4.2 이행, 모니터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정부, 시민사회, 학계, 유아교육보

육 현장, 부모 등)의 참여와 역할분담 책무성 증대해야 한다. 지방분권화 가속화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에 동의한다.

다양한 주체가 책무성을 갖고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 중 사회적 통합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담론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역할 분담과 책무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상향적 의사결정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이유가 지속가능발전의 기초이며 다른 16개 부문 목표와 유기적 연결성 때문인 것으로 볼 때, 그 유기적 연결성을 지표 현황 파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나. 세부목표 글로벌 지표 관련 과제

4.2 지표의 달성여부에 관해서 두 가지 성과지표(4.2.1과 4.2.2)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합한 지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원고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4.2.1의 경우 장애 영유아 현황, 4.2.2의 경우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교령(2018)의 연구에 따르면, SDG에서의 영유아 지표 중 Tier1(개념이 명확하고 측정 방법론이 있고,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된 자료)의 3/4가 모니터링 되고 있으나, 지표별 모니터링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즉, 영유아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가 지표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4.2.1과 4.2.2에 대한 개념 정의가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유아의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아동학회 및 관련학회에서 이러한 지표를 해석, 적용하는 통합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 4.2.1 지표 관련 과제 제안

- 주요 개념의 합의 : 사회심리적 안녕과 행복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 합의하기 위한 논의 장이 필요하다.
-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 또는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또는

타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센서스 등 인구학적 조사 및 연구가 요구된다.

- 현재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Offord center의 EDI 지표의 경우, 한국에서 전국적 타당화가 되지 못하였으며, 관련 연구도 부재한 실정이다. 영유아의 특성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민감한 도구의 개발을 통해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발달수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 적절하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아의 총체적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SDG 개념과 원칙이 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 “되었다. 특히, 주요 원칙 중 하나인 ‘세대 간 형평성’ 과 관련하여, 부모 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부모역량 및 역할 개념과 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제안해온 출생신고와 연동하여 병원 등의 기관에서 출산을 하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게 하거나 무상보육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2.2. 지표 관련 과제 제안

- 현재 4.2.2의 현황과 관련되어 주로 무상교육 여부만이 주요 이슈로 고려되고 있는데, 전체 목표(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 대상 목표)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비해 SDG에서는 환경보전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소비와 같은 포괄적인 이슈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SDG 4.2와 관련 지표를 고려한 생애초기 다면적 발달 요인에 대한 다학제적이며 종단적인 접근의 연구가 요구된다.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한 건강과 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WHO, 2017)이지만 이를 위한 근거로서 생애초기 영유아발달에 대한 다학제적이며 종단적인 연구의 수행은 제한적이다. 향후 SDG 4.2와 다른 목표들과의 연계를 위하여 다학제적이며 종단적인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사장된 자료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가정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 분석하여 영유아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가 교

육에 활용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시스템화 한다면 SDG 4.2의 국내의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및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 2

---

유혜선 본부장  
굿네이버스

# 교육2030 SDG4.2포럼

## 토론

굿네이버스

국내사업본부 유혜선 본부장

### INDEX

#### I. GN 국내사업 소개

#### II. 영유아정신건강을 위한 실태 및 제언

1. 영유아정신건강의 중요성
2. 영유아정신건강 실태
3. 제언

#### I. 보육서비스 미참여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

## 굿네이버스 사업 소개

-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 학대피해아동 및 심리정서 위기 아동을 위한 솔루션 사업 활동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및 심리정서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지표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의 남아와 여아 비율



**영유아 정신건강**

## 영유아 정신건강의 중요성

조기에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는 이후 성장하여 불안과 소아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부적응, 이로 인한 자살시도, 폭력과 비행을 비롯한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적응 문제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되므로

영유아기 문제를 미래 발견하여 진단하고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Hester, Baltodana, Tonelson, & Hendrickson, 2003)

## 영유아 정신건강의 현주소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 초등학교 1, 4학년, 중,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을 보정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있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돕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기의 경우 정서와 인지, 행동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전 생애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서,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영유아 정신건강의 실태

국내 0-6세 영유아중 8.25~28.78%가량이 인지, 신체운동 발달 및 행동 정서 문제행동에서 위험군에 속해있고 (보건복지부, 2013),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만 4~5세 유아 3,6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약 18%가 심리, 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 중 10%는 보다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굿네이버스, 2016)

## 영유아정신건강을 위한 지표 수립을 위한 제언

- 1 영유아 정신건강 연구 강화
- 2 영유아 정신건강 취약 대상 발견체계구축
- 3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4 부모교육 확대 및 부모상담 지원 강화
- 5 양질의 교사 양성 및 발견체계 교육 강화
- 6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보급

## 지표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기간의  
체계적인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참여율**



**보육서비스 미참여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 1. 취원율 현황

- 우리나라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 (3~5세 유아중 90% 정도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
- 그러나 10%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접근 필요

### 2. 유아기관 미등록 아동의 실태

-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 3. 제언

- 증가하는 취원율 지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 보육 체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는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THANK YOU!**

## [토론] 3

---

엄미선 회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오늘의 토론회는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 서비스는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발전방안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바, 오늘 발제해주신 문무경 박사님의 내용을 공유하며 토론자의 생각과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무경 박사님께서 발제해주신 내용 중 일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 현상과 가족기능 변화가 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 가치관이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조기교육 열풍(사교육)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 실시로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정책의도와는 달리, 전업주부의 종일제 보육 이용 증가 등으로 부모의 양육 기능 및 책임감은 저하되고 장시간 기관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부모간의 정서적 유대 약화 상호작용 시간 부족 및 영유아의 신체적 피로감 상승의 문제를 야기하였다(김중호 외, 2017, P81)라고 하였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조기 사교육은 공격성과 불안 스트레스 증대와 같이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부미, 이수정, 2010)고 하였으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예체능보다 학습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조사에 응답한 절반이상의 부모가 자녀의 현재 사교육 수준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현재 사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27~40%로 높게 나타난 실정이다(김은영 외, 2016)라고 조사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적정 학습시간 법제화를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을 선정하였다(청와대, 2017) 이상-〈발제원고 중 일부〉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

먼저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편이다.

현재 누리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반드시 '유아·놀이'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야 한다. 초등과정과 연계하여 초등과정을 뛰어넘는 유아교육과정의 교과·학습적 요소들은 제거하고, 유아의 쉼 권리와 놀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

미래를 향한 유아교육은 인공지능, 시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차세대 일자리는 미래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했듯이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은 창의성은 물론 문제해결능력과 협동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만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유아 교육 서비스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통해 함께 협업하는 문화를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1025 정부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확충계획은 물론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등을 골자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여 유아교육·보육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와 같은 교육부 방안 내용을 환영하며, 방안 내용이 계획대로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유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어린이집 대책 마련 등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는 이제 더 이상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 학부모,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여 유아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2018년 10월 28일자 연합뉴스를 인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21%, OECD 최하위 수준, OECD평균 67%이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국공립 취원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3~5세 유아교육 단계 유아중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비율은 21.1%다. 이는 OECD 35개국중 가운데 32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이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나라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뿐이며, 국가별로 보면

체코(96.5%) 에스토니아(96.0%), 슬로베니아(95.5%), 스위스(95.1%) 등은 국공립 취원율이 90% 이상으로 높다. 비(非)유럽국가중 멕시코(85.7%)와 이스라엘(63.0%), 미국(59.2%) 등도 국공립 취원율이 50% 이상이며, 일본 또한 한국보다 높은 25.8%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비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도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사립 교육, 보육기관(78.9%)은 모두 ‘독립형 사립’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받는 ‘정부 의존형 사립’으로 분류되어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만3~5세 유아 대상 교육을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부모님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자녀양육비 및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에서 부터 도시지역으로, 만5세에서부터 만3세로 의무교육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유아학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도 강력히 추진되어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듯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제도적 향상, 부모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토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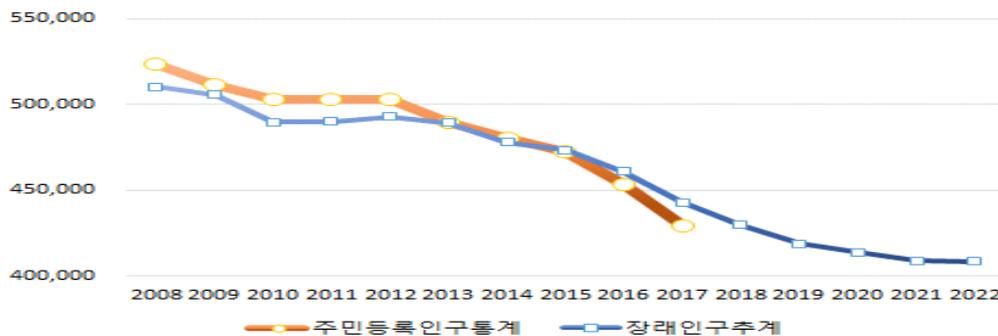
---

김현주 팀장  
서울특별시청

## SDG 4.2 이행 관련 서울시 보육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김현주 (서울특별시청)

- 지난 10년 간 서울시 0-5세 영유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장래인구 추계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향후 5년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2008년 약52만명 → 2017년 약43만명 → 2022년 40만명 추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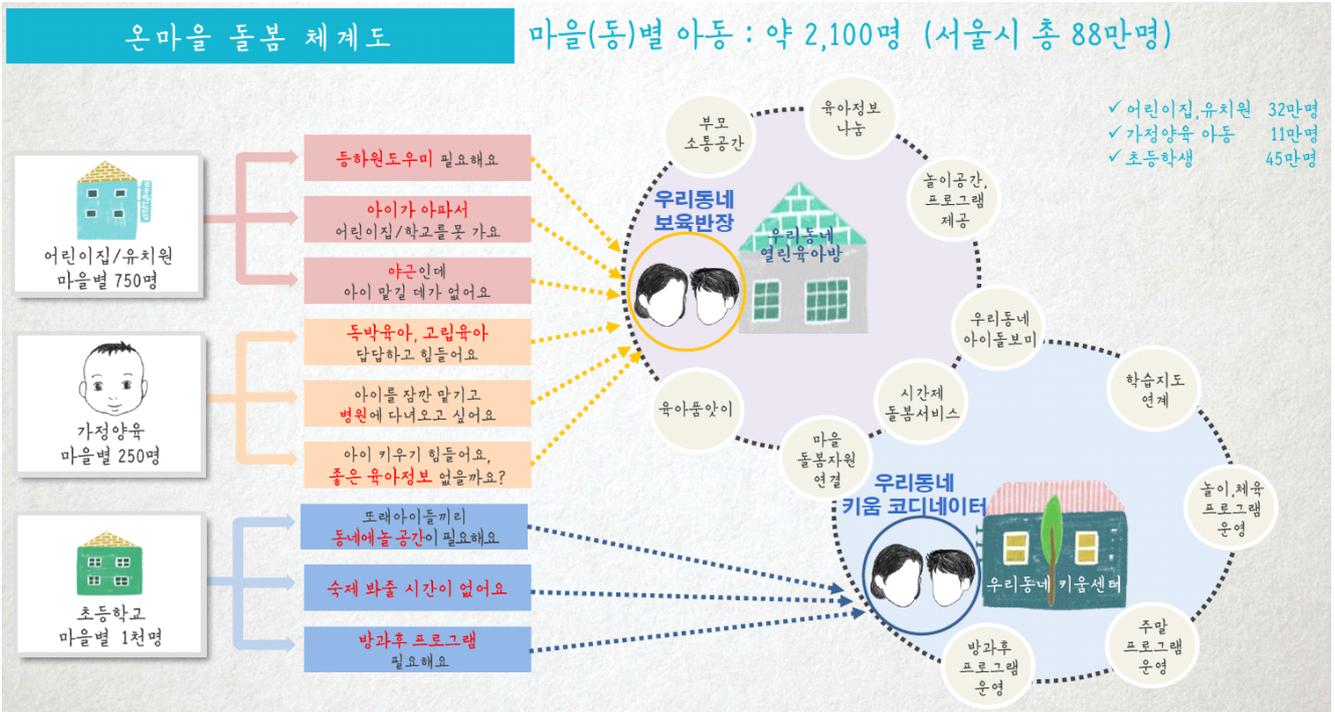
- 가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울시 2세대 가구비율이 66.5%에서 48.2%로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2세대 가구 중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는 8.2%에서 1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영유아 수 감소나 가구 구조의 변화는 보육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보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영유아 수 감소는 보육정책의 핵심영역인 어린이집 공급(지원)계획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 및 어린이집 적정 공급 규모 산출이 되어야 할 것임.

### □ 서울시의 보육정책방향

- 서울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보육 공공책임제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큰 축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임. ‘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데 영유아수 감소를 고려해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시설,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현 정부와 서울시의 또 다른 보육정책의 큰 축은 영유아 돌봄에 대한 자치구단위, 더 나아가 동 단위의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임. 서울시는 2018년 2월에 주거·자녀양육 분야 5개년 계획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주요과제

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음.

- 그 내용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지역사회의 보육, 교육기관 및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네'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마을공동체)까지 포괄하여 0-5세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중심으로, 6-12세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전업모의 독박육아, 고립육아의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수요 해결, 놀이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촘촘한 24시간 돌봄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이는 현대의 가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보육정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음.



자료: '18.2월 서울시 '청년에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발표 자료

#### □ SDG Target 4.2 성과지표관련 서울시 정책

-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현재 개념 정의 및 측정방법이 부재하다는 전제하에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제 보육 이용증가, 부모의 양육역량 약화,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약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마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설치하여 육아정보 공유와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동별 1개소 이상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별로 사교육 조장 및 비용의 편차가 심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1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수납한 도액을 결정하여 특별활동을 최소화하고 있고, 숲 생태활동, 신체활동, 예체능 활동의 비중이 61.6%를 차지함.
- **(취학전 최소 1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율)** 2017년말 서울시 3-5세 어린이집이용은 약10만명, 유치원 이용은 8만9천명으로 전체 3-5세 223천명의 84.7%가

이용 증으로 2016년말 83.9% 대비 증가추세임. 또한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도 누리과정 보육료 1인당 22만원은 인건비와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차액부담분이 89천원~105천원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현재 차액의 55%를 지원하고 있으나 '19년부터는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함.

## □ 향후과제

- 첫째, (교육부,보건복지부) '17.12.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행 누리과정을 유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나친 학습계획 중심의 교사의 지침서를 자유놀이 소개 위주로 개편, 유치원 평가를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발표함. 현재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보다 엄격한 평가로 인해 보육교사의 피로도가 높고 자칫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편된 놀이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등의 동일 적용 및 동일한 평가체계 적용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의 형식적인 12시간(07:30~ 19:30)이상 운영체계 개편이 시급함. '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보육 희망시간은 9시간6분인데 반해 실제로는 3-5세의 경우 8시간 1분으로 조사됨. 그 사유는 5시 이후에는 소수아동만 남게 되어 부모의 불안감이 있고, 보조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문제 등 어린이집 보육과정, 서비스시간, 정부보육료 비용 지원간 관계가 불명확한 데 기인함.
  - 유아반의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금액의 누리보육료(22만원) 지원에 대한 개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보장 등 부모의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이 보장되도록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함.

*\*어린이집 12시간 운영(07:00~19:00), 유치원 8시간 운영(09:00~17:00)*
- 셋째,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과정 구분없이 12시간 운영을 전제로 교사 1인 온종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1일 평균 9시간36분을 근무하고 있음('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18. 7. 1일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1시간)이 의무화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교사의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교사부족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또한 시급함.

## [토론] 5

---

정혜손 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라는 철학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을 발표하였다(교육부,2017.12.27.일자 보도 자료).

SDG Target 4.2와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가 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주제 발표자의 원고 <표 5>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표 5 >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 관련 국정과제와 SDG 4.2의 관련성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 관련 국정과제	SDG Target 4.2
1.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4.2.2.
2.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확대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증대)	4.2.2.
3. 저소득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입학 우선순위 부여 강화)	4.2.2.
4. 사회취약계층 유아에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사 확대, 다문화 유아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4.2.1
5.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적 격차 해소를 통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교사처우 개선, 자격체계 개편 등)	4c.1
6.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의 법제화를 통한 유아 중심 교육과정 운영	4.2.1
7. 영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교육 및 사교육 억제	4.2.1.
8.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등)	4a.1
9. 공·사립 유치원간 격차 완화	4c.1
10. 미래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유아 수 및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 등)	4a.1

자료: 문무경 외(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유아정책연구소, p.31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관련 국정과제를 토대로 재구성함.

## 1.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누리과정 지원금이 원래의 계획대로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누리예산 등 각종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이 여전히 많고, 효과가 미미하며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최근 실시된 각종 점검, 감사 및 수사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부실한 운영 실태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유치원 운영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면서 방과후 과정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교육과정 시간을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선언하면 어떨까?

## 2.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확대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목표를 2022년까지 40%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 병설유치원을 유희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
-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 (매입형 전환 포함)설립
-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
-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 도입

## 3. 저소득계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현재 공립유치원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유아에게 입학 우선순위를 1순위로 제공하고 있다.

<b>「처음학교로」 우선모집</b>	
<p>□ 국공립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자 확대</p> <p>○ (2019학년도) 1순위 법정저소득층,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확대)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p> <p>※ 구체적 반영 비율 :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전년동일),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하단 참조)</p>	
법정저소득층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5-74호</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p>	<p>• 국가보훈대상자(근거: 「국가보훈법」 제3조)</p> <p>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p> <p>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p> <p>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p>

<p>*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상위 자활대상자</li> <li>-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li> <li>-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li> <li>-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li> <li>-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li> <li>☞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li> <li>☞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li> <li>☞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li> <l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li> <li>☞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li> </ul> </li> <li>•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li> </ul>
<p>▲ 반영비율 : 100%</p>	<p>▲ 반영비율 :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p>

□ 온라인 자격 확인시스템 연계 추가

⇒ (추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 4.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의 법제화를 통한 유아 중심 교육과정 운영

1시간 이상의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바깥놀이 시간을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치원 평가에도 포함하고 있으며 ‘몰입’ 과 ‘쉽’ 이 있는 자유선택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웹툰을 제작,보급하여 소통과 공감의 유치원 운영을 지원한다.

#### 5. 영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교육 및 사교육 억제

과도한 조기교육과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유아들이 받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유아교육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건의해야 할 때이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

## □ 현 황

- 유치원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내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나,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요구 등으로 인해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시간 내에 영어를 운영하고 있음
- ※ 특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 시간 내에 수익자 부담으로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으로 유아 1인당 1일 1시간 내 1과목 참여 가능

## □ 문제점

- 유치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규제 근거 부재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관련법에 유치원이 빠져 있어 교육과정 내 영어를 실시하여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
-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인식 부족 및 교육과정 정상화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교육과정 시간 내 영어를 포함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금지 지침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일부 유치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과정 시간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실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 인식 개선

## □ 대책(건의)

-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킴
- 원장 및 교원, 학부모 책무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첫 학교인 유치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올바른 유아교육 정착의 기반 구축

## 『참고』

### ▶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폐해

- 사회 전반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 5세 유아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교육 수업은 국어(28.6%), 세 번째로 많이 참여하는 수업은 수학(17.3%)으로 학습 관련 수업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만 5세의 83.6%, 만 2세의 35.5%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으로 유아의 정서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 위축, 우울, 불안 등 내면적 문제가 커지는 등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욕심, 혹시 뒤처질까하는 불안감으로 사교육이 부추겨지는 추세이며 학부모들은 현재 사교육이 적당하거나 오히려 부족하다고 인식함

▶ 다섯 살 배기 10명 중 8명 매일 사교육(동아일보, 2017. 1. 10.)

▶ 두 살배기 10명 중 3명 사교육, “도 넘은 교육, 되레 정서 불안”(한국일보, 2017. 1. 10.)

## 6.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의 추진배경은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 과정 이용 확대 등으로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는 유아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안심유치원 운영의 목적은 유치원에서의 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추진 방침은 ‘18년,’ 19년 시범 운영을 토대로 ‘20년 본격 도입하고 유치원 평가 기준(건강·안전 영역)을 심화하여 지표 구성,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 안심유치원 선정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선정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 하고 선정 유치원에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 지원, 미선정 유치원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대효과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제고 및 유치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개선에 있다. 올해 서울의 경우 공모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평가 등 선정 과정을 거쳐 37개의 공·사립유치원이 선정되었다.

## 7. 미래 환경교육 개선

서울의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는 만 3세:16명, 만 4세:22명, 만 5세 26명으로 운영 되고 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를 과감하게 내리고 교사 대 유아 비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직전교육, 현직교육의 확대로 교사 역량 및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

## 8. 유아의 총체적 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역량 강화

부모역량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부터 예비 부모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목을 신설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부모교육에 대한 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남자들의 경우 군대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언론을 적극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의 연령대별로 알맞은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익방송 형태로 연중 방송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 9. 유·보 통합

이원화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